

촛불집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시위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 광화문 촛불 집회, 2004년 3월 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6월 7일 광우병 촛불집회,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등이 있었다. “촛불집회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전망”에서의 촛불집회는 2016년에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촛불 집회를 의미한다. 저자는 2016~2017년간의 촛불집회를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구조적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 국민적인 지지와 동원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와 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촛불집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의의, 그리고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본 비평문에서는 저자가 분석한 촛불집회의 원인을 비평하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난 현재의 관점에서 저자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저자는 촛불집회의 발생원인을 박근혜의 국정농단 및 신자유주의의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체제 이전에는 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국가가 통제를 하여 위기를 극복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이 크기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여기에 국가와 정치체제의 무능력이 더해져서 정치적인 혼란과 포퓰리즘이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했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민중의 분노도 촛불집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촛불집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뿐만 아니라, 다층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저자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체제와 국가 정치체제의 무능력이 더해져서 정치적 혼란이 온 것이 아닌, 정치체제의 무능력으로 경제체제의 혼란이 야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당시의 정권이 무능력해서 경제체제에 혼란이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경제 주의를 거쳐서 현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경제를 맡기는 것이다. 오히려, 진보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그러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보더라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2011년 이후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67%를 웃돌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7.6%였던 취업률은 2013년 68.1%까지 높아졌다” 고한다. “세월호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2014년도에는 67.0%로 낮아지기도 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하던 2015년 67.5%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기록을 보였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겹치며 2020년

취업률은 역대 최저인 65.1%를 기록했다.<sup>1</sup> 최저임금 공약은 지켜야 하니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해지고, 뻘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부동산은 어떠했는가? 최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하여 현 정부의 가장 아쉬웠던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뽑았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상반된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것은 우리들도 체감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집값 상승률은 다음과 같았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11만 가구의 시세 변동을 조사한 후,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이른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1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KB국민은행 시세정보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실소득 조사 결과도 참고했다."<sup>2</sup> 특히,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소득상승액의 192배나 되며, 이는 일반 서민이 서울의 집을 사려면 소득 전액을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25년 정도 걸린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를 무시했다. 경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간과한 채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지만, 투기 세력이 문제라는 터무니없는 진단을 내렸다. 즉,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문제가 없지만 정권의 무능력이 경제체제의 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둘째,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양극화로 치달고 있었고, 보수정권 9년 동안 이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체제의 위기가 온 것은 대부분 진보 정권이었던 것이다. 만약 양극화와 잠재적으로 대중들의 분노를 동원한 기반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으로 퇴임하지 못했을 것이다. 양극화가 글로벌적인 추세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심한 경제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촛불집회에는 경제적 동인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단순히 박근혜의 국정농단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

<sup>1</sup>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지만... 문재인정부 취업률 바닥", 세계일보, 2022.01.01

<https://m.segye.com/view/20220109509375>

<sup>2</sup> "부동산 자신있다"던 靑, 2년만에 "너무 죄송 드릴 말씀 없다", 중앙일보, 2021.09.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980#home>